‘쉬운 수능’ 진학지도 혼선

상위권·중상위권 차별화 안돼 … 주요대학·인기학과 경쟁 치열

“철저한 분석·상담 통해 공략 대학 결정해야”

‘쉬운 수능’으로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간 성적 변별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원점수가 대폭 오를 경우 대학에 지원할때 적용되는 표준점수의 차이가 줄어들어 상위권과 중상위권간 실력차를 구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학담당 교사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생의 특성에 맞는 대입 전형을 찾고, 상담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16일 광주 인문계고교 진학교사모임인 광주진학지도협의회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3개 과목의 1등급 예상 커트라인 점수는 언어의 경우 지난해보다 2점 높은 94점, 수리 ‘가’는 7점 높은 88점, 수리 ‘나’는 13점 높은 92점, 외국어는 1점 낮은 94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 수리, 외국어 등 3과목 1등급 평균 점수도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전년보다 8점 이상, 인문계열은 14점 이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원점수가 높아지면서 이를 표준점수로 전환할 때 상위권 학생군이 촘촘히 분포되는 ‘집결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의예과 등 인기 학과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변별력의 기준이 됐던 수리마저 고득점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진학지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진학실장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박연종 광주진학지도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만점에 육박하는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결국 상위권의 경우 변별력이 없어져 내신점수와 논술이 합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전체적으로 원점수가 높게 나오면 표준점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의 격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동안의 진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입시전략도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근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팀장은 “올해는 상위그룹의 변별력이 별로 없는 탓에 일선 진학교사들이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각 대학별 입시 유형도 제각각인 만큼 학생들은 진학교사와 철저한 상담을 통해 공략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택시기사에 LPG값 ‘바가지’

차액은 업체·충전소 나눠써

유가보조금 횡령 5명 검거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택시운송사업자·LPG 충전소 업주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택시운송사업자 심모(37)씨 등 2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신의 LPG 충전소를 이용하게 하려고 심씨 등에게 돈을 건넨 LPG 충전소 주인 김모(55)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광주시청 공무원 김모(47)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5억원, 8억5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일부인 1억5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북구에서 각각 충전소를 운영 중인 김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일반 충전소보다 ℓ당 100원 정도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은 뒤 그 차액의 60%인 140만~400만원을 심씨 등에게 건넨 혐의다.

심씨는 이 돈을 받고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바가지 요금’ 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한 혐의다. 또 담당 공무원 김씨는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지역 나머지 74개 사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LPG 연료에 대해 ℓ당 182~220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955〉 김종두

서울대 인문계 384~395점

전남대 의예과 378점 이상

광주진학지도협의회, 원점수 기준 전망

올 수능에서 수리영역이 전년과 달리 쉽게 출제됨에 따라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합격 커트라인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인문계고교 진학담당 교사 45명의 모임인 광주진학지도협의회(이하 광진협)는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수험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0 수능 성적 가채점 결과’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광진협은 원점수(400점 만점)를 기준으로, 서울대 인문계는 384(하위권 학과)~395점(최상위권 학과), 자연계는 354~393점으로 예상했다. 내신은 33~37점이 합격 가능선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인문계의 경우 373~381점, 자연계는 352~369점으로 분석됐다. 전남대는 의예과의 경우 378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인문계는 293~338점, 자연계는 247~289점으로 추정됐다.

광진협은 또 각 대학별 수능점수 산출방법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진협에 따르면 서울대는 수리영역에서 1.2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수리의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유리하다. 또 탐구영역에서 높은 백분위를 얻는 경우엔 연세대를 공략하는 게 좋다. 전남대는 과목별 표준점수의 최고점이 낮은 과목에서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소방관 산불 훈련 광주시 남구와 남부소방서 등은 제376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16일 효덕동 덕남마을 야산에서 재난재해 취약지역 산불대비 훈련을 가졌다. 소방관들이 실제 상황처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양 승용차 충돌 5명 사상

16일 새벽 5시30분께 광양시 광영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모(55)씨가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와 우모(31)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 뒷좌석에 타고 있던 장모(52)씨가 숨지고 이씨 등 3명과 카니발 운전자 우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g47@

영아 버린 10대 ‘철부지 엄마’ 입건

쌍나팔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갓 태어난 영아를 빈 주택가에 버린〈본보 10월 15일자 6면〉 ‘철부지’ 10대 소녀가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은 16일 자신이 낳은 사내아이를 유기한 A(17)양을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지난달 14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 뒷마루에 유기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아이는 현재 영아보호소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며 “중학교를 졸업한 A양이 갑작스레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안타까운 표정.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업자가 웃돈 분양 10억 부당이득”

임대아파트 주민들 고소장

광주지역 J아파트와 M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200여가구 주민들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분양전환을 강요해 1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P임대주택사업자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사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를 사기, 부당이득,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P사가 임대아파트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하면 이미 시세를 초과했음에도, 가구당 400만~500만원, 모두 10억9천만원의 ‘웃돈’을 요구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회사 측의 금융내역 등을 철저히 추적해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분양 사례를 막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회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정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파는 데 ‘웃돈’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주민들이 오히려 회사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관정개발 특혜’ 남구청 공무원 3명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16일 관정(管井) 개발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정개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부적격 농가에 혜택을 준 광주시 남구청 A(59·5급)동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추천한 부적격 농가를 사업자로 선정한 같은 구청 공무원 B(27·9급)씨와 C(36·기능 8급)씨를 각각 직무유기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월 관내 관정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농민 D(57)씨 등 7명의 부탁을 받고, 부자격 농가 6곳을 사업자로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인 B씨는 A동장이 추천한 농가가 부적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C씨는 지하수 이용 준공검사필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동장 등은 5년 이내 관정개발 지원을 받은 농가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심사 과정의 허점을 노려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관정개발업자로 선정된 농가의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관정개발업자인 K씨로부터 2곳의 관정개발을 원가로 해주기로 약속받은 남구 주민자치위원 E(45)씨와 업자 K씨를 각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